

# 한경 BUSINESS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계속 오르는 전셋값 '어디까지 가나'  
지영업자가 동네 상권서 생존하는 법  
장기 투자가 유리한 다섯 가지 이유

## 투자고수 PB 대상 설문조사

# 올해 최고 재테크 상품 '톱10'

### 대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스타 CEO는 누구

'새로운 10년' 준비하는데 읽어야 할 필독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식시장서 수백억 이득 본 내막  
'통큰 보상' 카드 꺼내든 이랜드그룹 왜?



# 2011

값 3,500원  
9 771228 444006  
ISSN 1228-4440

한국경제신문



## 중국의 임금·노동문제

# 소득 불평등 심화...사회불안 가중

중국 상하이의 겨울은 음울하고 옷 속을 파고드는 습한 한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진다. 안후이성과 쓰촨성 등 상하이 인근 지역에서 온 농민공(農民工)들은 최근 치솟는 물가로 상하이의 겨울을 나기가 더욱 힘들다.

농민공은 농촌 지역에서 성장하고 농업에 종사하다가 농촌의 저성장과 취업 기회 부족으로 대도시로 이주한 농촌 출신 근로자를 말한다. 2008년 말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45.6%인데 매년 도시화율이 1%포인트 정도 증가해 현재 도시화율은 50%를 조금 밑돌고 있다. 한국의 197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중국의 도시화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다. 농민공은 가사 도우미, 식당 종업원, 건설 근로자 등으로 취업하거나 대도시 주변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중국 대도시 곳곳에서 건설되는 공장들 가동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도시로 유입되는 농민공으로 채워 왔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도 마다하지 않아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저임금 구조를 지탱하는 잠재적 실업자군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농촌 인구가 급격히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호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도시에 호구를 두고 있어야 취직이 쉽고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농민공은 대부분 비정규

직이기 때문에 호구 취득이 불가능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노동력 제공하던 농민공 감소

최근 상하이에서 농민공 채용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이전만큼 상하이에 떠도는 농민공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서부 대개발과 농촌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농민공의 도시 유입을 저지했다는 시각이 있다. 잠재적 실업군이었던 농민공의 양적 증가세가 주춤하자 농민공의 임금이 오르고 있다. 가파르게 물가가 뛰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떨어뜨리자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도시 저임금 근로자층을 구성하고 있는 농민공의 양적 증가 추세의 둔화, 물가의 가파른 인상 등이 농민공의 임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됐고,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인상을 부추겼다.



중국을 고도 경제성장으로 절대적 빈곤을 해결했지만 극심한 소득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빈곤 문제에 봉착했다.

중국 내 한국 투자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때문에 동남아 등으로 사업을 이전해 왔는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이 추세가 더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저임금 구조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인 의류 제조업, 단순 임가공업에서 철수한 사례가 많다.

농민공이 주축인 도시 저임금 근로자들

의 평균임금이 올랐지만 농민공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명목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하이의 2010년 최저임금은 1120위안으로 2009년보다 16.8% 올랐다. 그러나 도시 지역 근로자들의 대다수는 낡은 아파트에 방 하나를 세내고 주방은 공동 사용하는 데, 방 하나 월세가 1000위안에서 1500위안이다. 최저임금으로는 상하이에서 월세를 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하이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개방 개혁을 통한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전략이 성공하면서 절대적 빈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빈곤층은 아직 두텁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노동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25일 장쑤성 옌청시에서 상하이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가

주최한 '지역 순회 투자 기업 경영 지원 설명회'가 열렸다. 특허청에서 파견된 유병덕 특허관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및 대응 전략'을, 필자가 '중국의 최근

노동 법령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강연했다. 옌청시에는 기아자동차 중국 생산 법인이 있는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옌청시에 있는 기아차 한국 협력업체도 경제 불황 없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투자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노사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



중국 노동법에서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자들이 단체 행동을 하면 감독 당국은 근로자들을 제재하지 않고 기업 측에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권유한다.

이 빈발하고 있는데, 임금 인상과 복지 향상이 주요 요구 사항이다. 한국 투자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이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으면 노사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단체 행동을 하면 감독 당국은 근로자들을 제재하지 않고 기업 측에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국 투자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빈번한 단체 행동에 대한 중국 감독 당국의 유화적인 태도에 불만이며 외국 기업이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외국 투자 기업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파업이 많았다. 일본계인 혼다·도요타와 한국계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파업이 있었다. 외국 투자 기업에서 시작한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은 머지않아 순수 중국 기업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노무관리의 어려움은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올랐지만 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2006년도 지니계수(0.4601)를 발표한 후 지니계수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지니계수를 공표하지 않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소득 불평등에 따른 사회불안이 초래된다고 한다. 일부 중국 학자는 중국의 지니계수가 이미 0.5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중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 10%를 넘나드는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적 빈곤을 해결한 중국은 이제 극심한 소득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빈곤의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 저임금에 의존한 외국 기업 철수 잇따라

중국 정부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7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12·5 계획 건의안'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경제 발전 방향을 '포용적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정리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앙경제공작회의 등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개최

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 '12·5 계획 건의안'은 추상적 내용의 9대 목표를 선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경제 발전, 경제 구조의 전략적 조정 진전, 도시 주민 수입 증대, 사회 건설 강화, 개혁 개방의 가속화, 중국 경제 발전 방식 전환의 실질적 진전, 종합 국력과 경제 경쟁력 및 위기 억제 능력 제고, 인민의 물질문화생활 개선, 전면적 샤오강(小康: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 사회 건설의 기초 공고화 등이다.

중국 정부가 '12·5 계획'을 통해 골이 깊어만 가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는 중국의 장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제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은 식상한 주제다.

중국 언론에서 '임금 조레 초안'에 관한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초안은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단체협상제도 강화', '최저임금제도 강화', '임금보조금제도 도입', '특수 분야 임금공시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목을 끄는 것은 '특수 분야 임금공시제도'다. 이는 전력·석유화학·전신·은행 등 독과점 분야의 임금 수준을 공표하고 노동부서의 허가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대표적 국유 기업의 실질 주주인 국무원 국유자산감독위원회가 임금공시제도를 반대한다는 점이다. 독과점기업의 임금 공시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향후 중국 사회가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최정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상하이대표처 수석대표



서울대 사회과학대 졸업,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진수생과정 이수, 사법연수원 제1기 수료, 대한민국의 주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현), 차이나 데스크(China Desk) 자문위원(현).